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지방직 수탁 7급-2010. 10. 9)

* 김종욱 교수 해설
(강남박문각 행정학 및 지방자치론 교수)

<출제평>

결론적으로 너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지방자치론 시험문제라기보다는 행정학의 지방행정파트에 대한 문제수준이다. 사실상 행정학의 지방행정파트와 행정법의 지방자치법 부분을 철저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100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가 지방자치론과목 도입 첫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처음 도입된 과목의 문제는 정책적 차원에서인지 무척 평이하게 출제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자치론 수험전략에 2010년 수탁7급 수준을 수험공부의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한 과목에서 불가피하게 낭패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난이도를 떠나 모든 학문분야에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교재의 문제를 그 기준으로 삼아 공부하길 바란다. 예측할 수 없는 다음 시험의 난이도에서 전략적인 고득점을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문 1】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요건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 ③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 ④ 광역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으나 기초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만 존재한다.

<정답> ④

<해설> 지방선거에서도 광역과 기초 모두 10%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문 2】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아닌 것은?

- ①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② 양곡의 수급 조절
- ③ 가축전염병의 예방
- ④ 중소기업의 육성

<정답> ②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지방자치법 11조)에는 양곡의 수급조절 등 전국적 규모의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문 3】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하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도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 ② 광역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재외국민은 모두 주민투표권을 갖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이 없다.

④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대상이 아니다.

<정답> ③

<해설> ③ 주민투표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문 4】 현행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그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③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하지 아니한다.

④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정답> ②

<해설>②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일단 이루어져야 한다. 미달되는 경우는 주민투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문 5】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적극적 관여가 배제된다.

②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다.

③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한다.

④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경비를 부담한다.

<정답> ④

<해설>④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이므로 국가가 처리경비를 부담한다.

【문 6】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에 두는 시는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② 도의 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도지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④ 도는 타 시·도에 두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문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률과 효과의 면에서 사전적 통제가, 민주와 자율의 면에서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②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를 태만하게 할 경우 즉시 국가의 비용으로 대집행한다.

④ 오늘날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에 비하여 행정적 통제가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한다.

【문 8】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중층제와 비교하여 단층제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억제한다.

② 행정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③ 권한과 기능 중첩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이중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단층제를 하게 되면 기초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으로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비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문 9】 오늘날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의 경영화를 추구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결정자이며 또한 생사자인 공급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방식(contracting-out)

② 허가방식

③ 사무위탁

④ 이용권 지급(vouchers)

<정답> ③

<해설> Savas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생산하는 유형에는, 정부서비스와 정부간 협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무위탁은 정부간 협정에 해당한다.

【문 10】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둔다.

③ 기초지방의회는 의원이 최소 13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은 과거의 지방자치법 규정의 내용이다. 종래 기초의회에는 상임위원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특정사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만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91년에는 기초의회도 정원이 13인 이상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3개에서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 정부의 지방분권화 작업에 따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지방정

부의 조례로 정하게 하였다.

【문 11】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과 그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 ㄱ. 지방분권특별법
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ㄷ.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ㄹ. 지방자치법 |
|---|

- | |
|--|
| A. 지방이양추진위원회
B.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C. 지방분권촉진위원회
D. 지방자치분권위원회 |
|--|

- ① ㄱ - D
② ㄴ - C
③ ㄷ - B
④ ㄹ - A

<정답> ②

<해설> 정확히 본다면, 출제오류의 문제이다. 보기에서 현행 법률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만이다. 종래 지방분권추진의 근거가 되었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폐지되고, 「지방분권특별법」은 이명박정부에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2008.2.29). 현행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참고로, 기존의 법률에서 설치된 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다.

【문 12】 조선시대 지방자치에 대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 | |
|---|
| -해당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심의한다.
-1895년 개화파 정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참석자에 대한 신분차별이 없었다.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
-오늘날의 지방의회에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
|---|

- ① 향청
② 향약
③ 집강소
④ 향회

<정답> ④

<해설> 갑오개혁에 의해 설치된 향회에 관한 것이다.

【문 13】 중앙집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규모의 법칙 등을 통한 행정의 기계적 능률성 확보에 유리하다.
②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유리하다.
③ 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④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 구현에 유리하다.

<정답> ④

<해설> ④만이 지방분권(분권화)의 장점이고, 나머지는 중앙집권(집권화)의 장점이다.

【문 1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집행기관우위형의 기관분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② 재의결한 조례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③ 의결기관은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정(1949년)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과 지방의회 해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정답> ④

<해설> ④ 제정지방자치법(1949년)에서는 지방의회의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시·읍·면장의 의회해산권이 규정되었었다.

【문 15】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의 개최시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유급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부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정답> ①

<해설>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

【문 16】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① 소방서

② 세무서

③ 지방검찰청 지청

④ 경찰서

<정답> ①

<해설>소방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로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관(시·도지사가 감독하는 소방본부와 소방서)은 단체장의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에 해당된다.

【문 17】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초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 ②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1985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지방자치헌장에 반영되었다.
- ④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한다.

<정답> ②

<해설> ②는 월권금지의 원칙-ultra vires 원칙(지방자치단체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 행사한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문 18】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전국적인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 저해
- ② 지역주민의 민주적 통제 약화
- ③ 사무의 일부가 중복되어 비효율 초래
- ④ 지방행정의 종합성 제약

<정답> ①

<해설>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행정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있는 업무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문 19】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확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은?

- ① 조정교부금
- ② 특별교부세
- ③ 분권교부세
- ④ 부동산교부세

<정답> ③

<해설>③ 분권교부세에 관한 것이다.

【문 2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을 택하였다.
- ② 실제에 있어 개별적 사무배분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더 폭 넓게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다.
- ③ 사무배분방식이 간편하고, 상황에 따른 사무처리 주체의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
- ④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명확한 구별이 모호하여 행정주체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포괄적 배분방식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의 명확한 구별이 없어 중앙정부가 자치사무 영역에 쉽게 침범한다.